

# ‘젊은 사자들’의 혁명과 증발되어버린 ‘그/녀들’

— 4월혁명의 재현 방식과 배제의 수사학

김미란\*

## 차례

1. 들어가면서: ‘대한의 아들딸’이거나 ‘폭도’이거나
2. 세대론을 활용한 혁명사(史) 쓰기
3. ‘그/녀들’이 소거되는 방식
4. 마치면서: 그/녀들은 어디에 있는가—민중의 발견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4월혁명을 다룬 당대의 기록물들과 소설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되면서 기록되었는가를 살피고,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혁명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면서 혁명사가 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을 혁명사의 중심에 위치 짓고자 한 것을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 대학생들은 혁명의 목표를 국민 주권의 회복에 맞추었고 사건의 기록자들은 이를 학생혁명의 성취로 인증해 주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주권 행사의 주체’로 상상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이 주권 실현의 유일한 방법으로 재선거를 요청했던 것은 실제적인 동등한 시민권을 열망하는 것이라기보다 형식적 평등의 제도적 실현을 추구하는 일에 불과했다.

물론 당시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주체형성의 초기단계였으므로

---

\* 연세대학교 강사

민중은 겨우 학생들의 시위에 동원될 준비만 되어 있었다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학생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혁명에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오히려 하층민은 실상 통제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상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폭동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었으며, 정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은 폭력과 비폭력의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을 통어하면서 혁명의 방향을 조절해 나갔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는바, 4월혁명이 남성들의 정치 투쟁과 정치적 경쟁의 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4월혁명, 대학생, 국민주권의 회복, 폭력과 비폭력의 이분법, 하층민, 도시빈민, 폭도

## 1. 들어가면서: ‘대한의 아들딸’이거나 ‘폭도’이거나

1960년 4월혁명에서 학생들이 담당한 중추적인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4월혁명 전까지 학생들은 “입지안정만을 피하여 미국유학아니면 하루의 향락을위해 이성과의 교제로 세월을보내거나 그도 아니면 자살 『알바이트』 타락을 한다”는 세평에 시달렸으나,<sup>1)</sup> 주권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비의회적, 비제도적인 ‘운동의 정치’를 하기 위해 거리에 집단적으로 나선으로써 그동안의 무력한 개인주의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당시 남한 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말없는 세대’가 “오랜 잠을 깨고 소생하였”다는 전언이 널리 퍼졌고<sup>2)</sup> 소생한 ‘젊은 사자들’<sup>3)</sup>의

1) 『해방10년의 대학변천』, 『대학신문』 제121호, 1955. 9. 5, 3면.

2) 학민사편집실 편, 『사실: 침묵에 잠겼던 한국의 젊은 세대 잠을 깨다(『위싱턴 포스트』, 1960. 3. 16.)』, 『4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304쪽.

3) 혁명 직후 널리 쓰인 ‘젊은 사자들’이라는 수사는 1960년 4월 26일 개봉된 전쟁 영화 『젊은 사자들』에서 빌려 온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젊은사자들 다시상이답으로』

정치적 움직임은 국내외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재구성하는 담론 작업의 일환에 해당할 터이다.

그런데 학생들을 혁명의 중심에 위치 짓는 이 담론화 과정은 4월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민중들 특히 도시빈민들의 역할을 공적 역사에서 삭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당시 도시빈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공적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치 세력화되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 참여가 지닌 의미가 대폭 소거되는 방식으로 혁명에 대한 담론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가치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말하자면 혁명 참여세력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끼어 있었으나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독자성이나 이질성은 주목받지 못했으며,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데모 군중이라는 집단적 호명 방식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존재를 인정받았던 것이다.<sup>4)</sup>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통제력이 가장 약하게 미친 학생 집단<sup>5)</sup>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전개

---

(『경향신문』, 1960. 4. 29, 3면)나, 『노한 사자들의 증언』(『사상계』 제83호, 1960. 6)에 서처럼 대학생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살리기 위한 표현으로 당시에 자주 채택되었다.

4) 학생들의 역할이 갖는 한계는 민중민주주의적 이념 지향에 따라 민중을 운동의 주체로 정립하려는 논의가 무성했던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김주열과 오성원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다. 4월혁명 당시에는 고등학생 김주열의 죽음이 학생들의 희생을 상징하면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도시빈민들의 적극적인 혁명 참여를 상징하는 구두담이 소년 오성원의 죽음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재발견되는 것이다.(학민사편집실 편, 위의 책, 231, 248쪽) 즉 이는 1980년대 민중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의 주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셈이다. 박태순도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의 시신」(『역사비평』 통권 18호, 역사비평사, 1992 봄호)에서 오랫동안 잊힌 구두담이 소년 오성원을 복권하고 있다. 올해 3·15의거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성원을 주인공으로 삼은 창작 뮤지컬 『3월이 오면』(극작 이윤택·연출 문종근)이 공연되었고,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성원을 비롯한 도시 하층민들의 혁명 참여를 다룬 드라마 『누나의 3월』이 방영된 것도 그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노동자·농민들은 이와 달리 조직화 혹은 정치 세력화를 이루어내기가 전혀 불가능했던 1950년대의 상황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건설 이후 줄곧 주체 구성 담론을 주도한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지식계층을 역사의 주역으로 표상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주체화 작업 외중에 민중에 대한 논의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중은 지식계층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대상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천명하는 언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폭도로 분류된 구두담이 소년들이나 노동자, 실업자와 같은 도시빈민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할 집단의 언어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예컨대 학생들은 혁명 현장에서 외친 슬로건에서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쓴 수기<sup>6)</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 표명을 지속적으로 수

5) 정기영, 「4월혁명의 주도세력」,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I』, 사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길사, 124쪽.

6) 혁명 당시부터 혁명 이후에까지 수기가 범람했지만, 수기를 쓴 사람들은 대다수가 대학생이었다. 더욱이 이 대학생들은 대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이 난립하고 교육적 부조리가 방기된 채 교육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고학력 실업자군이 누적된 상황이 4월혁명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강순원, 『분단사회의 종속적 교육발전』,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I』, 63~64쪽 참조) 하지만 혁명은 이른바 일류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서사화되면서 대학 제도의 문제점이 혁명의 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표면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의 위계화와 서열화는 혁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대학의 위계화와 서열화보다 계급차와 성차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담론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로 4월혁명 전에 결성되었던 진보당은 젊은 당원이 많았고 그중 이류 학생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89쪽)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대학 차별과 지역 차별이 당시 학생들의 이념적 지향에 영향을 끼친 중요 요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언어보다는 행위로서 자신들의 분한을 표출한 도 시민민들은 애초부터 혁명의 주도세력과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이승만 정부의 ‘국민주권 강탈행위’<sup>7)</sup>에 맞서 ‘주권쟁탈의 데모’<sup>8)</sup>를 감행할 때 이를 천명하는 자신들의 언어를 소유했지만, 민중들은 아무런 슬로건도, 조직적인 움직임도 없이 무작위로 데모대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또한 사적 기록에든 공적 기록에든 혁명의 기록자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학생혁명, 시민혁명, 민주혁명으로 적어 넣었으며, 혁명의 성과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설을 지지했다. ‘민중의 승리’<sup>9)</sup>라는 진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민중의 승리란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한 대학생들이 거둔 성과를 가리킴에 다름

7) 민주당소속 민의원 일동, 『3·15 정부통령 선거 무효선언』, 학민사편집실 편, 위의 책, 1984, 62쪽.

8)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4월혁명-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창원사, 1960(5. 8 인쇄되어 5. 15 발행됨), 280쪽. 한편, 4월혁명은 ‘주권투쟁’이라는 판단(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269쪽)은 서중석만이 아닌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9) 양우근(고려대학교 행정과 4년), 『서문을 대신하여: 불란서 혁명처럼……』,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위의 책, 29쪽.

한편, “청년학생 그리고 시민의 4·19 4·26 항쟁”은 “청년의 정의의 위력이 그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무지하다는 대중이 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진술에서 대중의 지적 능력이 존중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다(김민중, 『젊은 세대의 영원한 표적』, 박수만 편, 『사월혁명』, 사월혁명동지회출판부, 1965, 399쪽). 하지만 이는 지성을 근대적 개인을 판단하는 최상의 척도로 생각했던 당대의 주체 인식 방법에 의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형성된 주체의 위계화 담론 자체를 건드리지는 못한다.

참고로, 이어령이 한국의 작가들은 4월혁명 전에는 “4·19혁명의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예언적 인물을 창조하지 못했”으며 “4·19혁명은 지성의 저항이었지만 지성인의 최전선에 있는 문인들은 간접적으로도 그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비판할 때, ‘지성’이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어로 선택된다.(이어령, 『4·19혁명은 우리 문학에 무엇을 남겼나』, 위의 책, 324쪽) 이것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체의 위계화 담론 안에서 지식인의 참여를 논하는 일이다.

아니었다.

해방기에는 “구체적인 정치적 슬로건을 앞에 걸고 거리로 나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명료하게 말할 수 있었던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존재했으며 이 점에서 위로부터의 동원을 기획한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리의 정치에 참가한 수많은 민중 역시 “정치적 주체”였음을 의심하기는 어렵다.<sup>10)</sup> 그와 달리 4월혁명에 참여한 하층민들은 자신의 언어도, 슬로건도, 대변자도 갖지 못한 처지였다. 이 혁명 참여자들은 대개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4월혁명에 이르는 시기에 광범위하게 창출된 도시빈민들이다.<sup>11)</sup> 이들은 주로 한국전쟁으로 유입된 월남인구와 농촌에서 이농한 도시 부랑자들<sup>12)</sup>, 1950년대 후반부터 도시로 유입되어 1960년에는 244만 명에 이르는 제대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불안정한 고용구조하에서 저임금과 고실업 집단을 형성하였다.<sup>13)</sup> 이 도시빈민들은 혁명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4월혁명 사망자 수에서도 입증된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며 ‘희생의 통계학’<sup>14)</sup>은 학생들의 고귀한 죽음만을 강조하였다.<sup>15)</sup>

10)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26집, 상허학회, 2009. 6, 96~97쪽.

11) 1950년대 도시빈민이 형성된 구조적 요인으로는 통화 증발과 인플레이션(1955~1966년 사이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10.4%), 농지개혁의 불철저성과 저곡가정책 등으로 인한 농촌의 몰락, 원조경제하의 종속적 자본주의와 공업화를 저해하는 종속적 산업구조, 1957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한 원조감축과 경제불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1950년대 빈곤 민중은 매우 광범위하게 창출되었다. 한국정부가 추산한 요구호자 수가 1957년도에 446만 명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만연한 빈곤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통권46호, 1999, 183~186쪽 참조)

12) 『늘어가는 이농민 부산에 천여명 부랑』, 『조선일보』 1954. 6. 26, 조간 3면.

13) 이영환, 앞의 글, 185~186쪽.

14) 조희연·조현연,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조희연 편, 함께읽는책, 2002, 156쪽. 이 용어는 조희연

물론 당시의 수많은 기록에서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 학생과 민중의 연대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순간은 강산이 다시 깃을 피는 듯했고, 내 동포의 슬기로움이 자랑스러웠고, 전후좌우의 학우와 남녀노소들의 모습이 순교자들처럼 거룩할 뿐이었다. 일호의 사심도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자유·민주·조국에 대한 염원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래서 총구를 우리에게 겨누는 그들에게까지 나는 한 핏줄로 이어진 애정을 느꼈으며, 결국엔 그들도 우리 편으로 돌아와 ‘독재타도’ ‘자유만세’를 불러줄 것이라고 확신했다.”<sup>16)</sup>와 같은 일체감을 표현하는 대목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 일체감은 군중들이 폭도로 규정되는 순간 바로 붕괴된다. 계엄사령관 송요찬이 “4월 19일 평화적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폭도가아니다. 단 시위중 살인·방화·정부재산및 공공시설에 대한 파괴를감행한자는제외된다.”<sup>17)</sup>는 경고문을 발표했을 때, 이 경고문은 “송계엄사령관이 말한대로 살인·방화·파괴를한 사람외에는 폭도가 아니며 이들 부상자 대부분이 억울하게 총에맞은 대한의 아들·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재해석되어 유포되었다.<sup>18)</sup> 이에 따라 시위대가

---

과 조현연이 사용한 ‘희생의 통계학’을 차용한 것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두 연구자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권위주의정권과 국가폭력에 의해서 얼마만한 희생이 있었는가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통계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희생의 양적 규모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4월 혁명 당시와 그 후에 통계적 수치를 활용해 학생들의 희생을 부각시킨 ‘희생의 정치학’을 논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15) 예컨대 동아일보 4월 21일자에는 사망자 명단(97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학생이 20명(중·고등학생 포함)이며 소년 11명, 노동자와 무직자 청년들이 39명, 중장년이 12명 등이지만, 사망자 명단과 함께 제시된 설명은 희생자 대다수가 학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명단과 해석의 불일치가 바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혁명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이와 같은 기사는 계속 양산되었다.

16) 정창중, 『진한 빛을 다시 찾아서』, 학민사편집실 편, 위의 책, 1984, 242쪽.

17) 『살인·방화·파괴를감행한자이의 데모대는폭도가아니다』, 『동아일보』 조간, 1960. 4. 22, 3면.

폭력과 비폭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승만이 해야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계엄사령관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성명서에서 “학생제군들의 정의로운 대열에는 일부 불량배가 섞여 약탈 방화 파괴등의 난행을 일삼고있으니 이것은 제군들이 힘껏쟁취한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 실로 안타깝기 한정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다. 또한 “본계엄사령부에서는 이러한 불량배들을 일소하여 학도제군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진력하고있으나 지금상태처럼 질서가 혼란하여 서야 이어찌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묻고는 “친애하는 학도제군”이 “이러한 질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sup>19)</sup> 시위대를 불량배와 학생으로 분할하면서 파괴와 질서의 이분법을 활용해 학생들을 공무에 동원하던 것이다. 이는 학생과 민중의 연대를 크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으리라고 판단된다.

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은 폭도들과 분리되어 이해되었지만,<sup>20)</sup> 당대의 기록에서 이 분리 작업에 대한 반발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18) 『나라의 큰일과 희생자들: 4·19의 진상』, 『소년동아』, 1960. 4. 24, 4면.

19) 『질서바로잡자』, 『동아일보』 조간, 1960. 4. 27, 3면.

20) 이와 같은 기사는 자주 눈에 뜨인다. 4월 22일자 신문에는 “서울 지방법원이 ‘4·19, 사태의 주모자로 검찰이 신청한 13명 중 7명에 대하여 ‘소요’, ‘방화’, 및 ‘강도’ 혐의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명단을 보면 학생이 1명, 무직이 5명, 노동자가 1명이 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동아일보』 조간, 1960. 4. 23, 3면) 23일자에는 “‘방화’, 또는 파괴행위를 한 자로” 구속된 23명 중 학생이 5명, 무직 9명, 기타(운전수, 상업, 노동자 등)가 9명이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또한 “부산에서 구속된 시민은 12명으로 전부가 불량배이며 광주에서는 6명으로 그중 학생이 2명 불량배가 4명이다.”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동아일보』 석간, 1960. 4. 23, 3면) 학생의 구속이 적은 것은 무엇보다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학생의 신분을 보장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계엄령 아래에서는 어떤 종류의 ‘데모’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학원의 질서는 침해할 수 없으며 학생의 신분은 위협할 수 없다.”고 언명한 바 있다.(『학생신분위협반을 수 없다』, 『동아일보』 조간, 1960. 4. 26, 3면) 이러한 사정으로 학생은 구속되는 일이 드물었으며, 구속된 대다수는 ‘불량배’로 지칭되었다.



불가능하다.<sup>21)</sup> 간혹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거론될 때면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었다.<sup>22)</sup> 또한 이러한 혁명에 대한 기록은 자유주의적 정치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이 독점하였던 터이다. 따라서 당대의 혁명 기록물은 ‘민중의 정치’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정치’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다.

4월혁명을 다룬 소설들 역시 대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혁명에 대한 당대의 담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물론 모든 텍스트가 그렇듯이, 4월혁명을 다룬 소설 텍스트들 역시 이질성과 복수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들에서 선택되고 재현된 혁명 담론이 비록 동일한 대상을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단일한 담론 작업에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가 포착하지 못하는 어떤 잔여(殘餘) 혹은 끝내 넘어설 수 없는 임계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앞

21) 게다가 당시의 신문과 논평 자료들, 소설 텍스트는 ‘긴 4월혁명’의 시기(박명림, 『제2공화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변화』,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1996, 210쪽)가 아닌 4월 19일에서 26일까지의 시기에만 집중함으로써 혁명의 의미를 크게 한정시켰다. 하지만 노동자와 농민들은 4월혁명 직후부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전기호, 『4월혁명과 노동운동』, 이우재, 『4월혁명과 농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Ⅱ』, 4월혁명연구소 편, 1990, 한길사 참조) 그러나 이는 4월혁명을 역사화하는 담론 작업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차라리 군사 쿠데타를 유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22) 3·15 부정선거를 비난하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사이비 학도’로 취급되기도 했다. “지난 3·1절을 전후하여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학도들이 모당의 사주를 받아 이성을 저버린 일시적 열기와 감정으로 불순한 정치적 난동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다.(서울특별시 경찰국장, 『경고문』, 학민사편집실 편, 위의 책, 1984, 57쪽) 또한 당국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석한 시위자들을 “낮 데모=학생, 밤 데모=불량배(사이비학생 혹은 가짜학생)”로 구분하면서 폭력 행사를 비정상적인 난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혀진 여성의 서사들』,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4·19혁명과 여성』, 한국여성문학학회 외, 2010. 4. 17, 38~39쪽 참조.) 하지만 4월혁명에서는 학생과 사이비 학생 대신, 학생들과 불량배를 대비시키는 방식이 등장한다.

으로 살펴보겠지만, 문학 텍스트에서 담론간 견제와 충돌보다는 상호 모방적 특질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4월혁명을 다룬 당대의 기록물들과 소설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되면서 기록되는가를 살피고,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혁명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면서 혁명사가 구성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세대론을 활용한 혁명사(史) 쓰기

혁명에 대한 당대의 기록물들은 혁명사를 구성하는 주요 원천이다. 4월혁명의 경위를 시시각각으로 보도한 신문 기사와 혁명 상황에 대한 갖가지 논평을 담은 사설뿐만 아니라 혁명 직후 속속 간행된 혁명사들, 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다룬 수기, 혁명을 서사화한 문학 텍스트 등이 모두 혁명의 기록물에 해당된다. 이 모든 기록 행위는 혁명에 대한 공적 기억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혁명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혁명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세대론에 입각해 있었다. 1950년대 대학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대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은 4월혁명을 세대 대결적인 투쟁<sup>24)</sup>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실제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한 혁명은 세대론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 해석을 범람케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물론 4월혁명 전에도 세대론에 기반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

23)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제200집, 역사학회, 2008, 650쪽.

24) 고영복, 「4월혁명의 의식구조」, 『4월혁명론』, 강만길 외, 한길사, 1983, 98쪽.

한 기대는 존재했다. 근대 국가 수립 후 국가와 사회 건설의 주체를 확정하는 담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존재는 지식인과 미래의 지식인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4월혁명 전까지 “신문삼면은 젊은 세대의 비행과 부도덕으로 덮”<sup>25)</sup>였으며 대학생들은 “젊음의 표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젊은이들”<sup>26)</sup>이라고 비난 받았지만, 그 비난이 청년들의 사회적 책무 강조나 그에 대해 기대와 분리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세대론에 입각해 이루어졌다.<sup>27)</sup>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이들 또는 여러분같이 교육받은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있”<sup>28)</sup>는 입장이나 “권위를 스스로 찾아서 세워야 하니까 지금 청년들의 갈 길은 썩 어렵”<sup>29)</sup>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었던 것이다. 즉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해낼 수 없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 길 역시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 나설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므로 4월혁명 이후 청년 세대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세대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태가 아닌 것이다.<sup>30)</sup>

25) 안병욱, 『기성질서에 대한 레지스탕스의 구조』, 『사상계』 제69호, 1959. 4, 36쪽.

26) 김동명, 『상실된 젊음』, 『사상계』 제46호, 1957. 5, 228쪽.

27)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28쪽 참조.

28) 이양하, 『나라를 구하는 길-모 대학교에서의 강연』, 『사상계』 제50호, 1957. 9, 225쪽.

29) 함석헌, 『좌담회: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사상계』 제38호, 1956. 9, 145쪽.

30) 물론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독재와 권력의 야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터전을 확립하는 과업이 부과”된 “오늘날의 젊은 신세대는 내일의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요, 내일의 사회의 담당자가 될 것이요, 내일의 문화의 창조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혁명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권장한 이와 같은 주장들은, “오늘날의 기성의 구세대는 젊은 신세대에 대하여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끌고 갔다”(안병욱, 『리의 세대와 의의 세대』, 『사상계』 제83호, 1960. 6, 103~104쪽.)는 평가를 동반하기가 예사였다. 그리고 이것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지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표상되었음을 의미하

4월혁명을 서사화한 소설들 역시 세대 담론에 의거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혁명 서사를 만들어낸 작가들 대다수는 당시의 혁명에 가담한 청년들이 기성세대로 분류했던 집단에 속해 있기도 하다. 예컨대 1960년대 신진 작가와 문학인들에 의해 '4·19세대'로 불린 박태순과 1950년대 기성작가로 분류된 이호철은 모두 4월혁명을 소설화한 작가들이다. 하지만 『무너진 극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 타종(打鐘)의 울림을 새로운 세대였던 우리가 거느리고 나타날 수 있었음은 그 얼마나 행복하며 영광되며 축복스러웠던 것인지?”라고 적고 있는 박태순의 태도는 이호철과 달리 '4·19세대'의 세대 감각과 주체 의식, 시간 감각에 입각해 있으며, 이러한 의식 하에 4월혁명의 정치적 공간을 텍스트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반면, 도시 하층민의 삶을 주로 다룬 이호철이 이례적으로 『용암류』에서 불러낸 대학생들은 박태순의 대학생들과 동일한 시기에 존재한 인물들일지라도 그와는 다른 세대에 속한 작가에 의해 호출되었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상이하다.<sup>31)</sup> 그렇다면 박태순과 이호철의 주체 구성 방식의 차이는 세대 의식과 크게 관련되어 있을 터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4월혁명 당시 29세의 사회인이었던 이호철은 『용암류』의 등장인물을 기성인이 아닌 학생으로 설정한다.<sup>32)</sup> 이 소설에는 세 대학생이 등장한다. 애인 수경이 자신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삶에 대한

---

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의 세대 담론이 기성세대의 사회적 죽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의 교육에 의존하여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정할 것을 권장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 후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아 근대화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성세대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28~29쪽 참조.)

31) 물론 발표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이점 역시 존재한다.

32) 이호철, 『용암류』, 『사상계』 제88호, 1960. 11.

“지독한 무위와 권태”를 느끼는 동훈, 유한마담들에게서 “학비나 뜯어 쓰”는 태규, “현실의 진수 내음새를 번뜩”이면서 학생 시위를 기획하는 석주가 그들이다. 동훈은 석주를 통해 자신이 매달리고 있는 “사변”적이고 “추상화된 현실”이 아닌 “이상하게 강인하고 집요”하며 “비린 내음새”를 풍기는 “북적거리는 동대문 시장”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본다. ‘비린내’는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엄청난 긍정”인바, 바로 “석주에게서 그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이 비린내를 맡아 버린 동훈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수경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요청하고, 석주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용암류』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 중 동훈과 태규는 현실에 편승하거나 사변에만 몰두하는 1950년대의 대학생상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석주는 “지금이야 어는 때”인지 알고 불필요한 사변 없이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4월혁명의 대학생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용암류』는 기성세대가 기존의 대학생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학생상을 승인하는 한 장면에 해당한다.<sup>33)</sup>

---

33) 김지미는 한무숙의 『대열속에서』, 유주현의 『밀고자』, 이어령의 『환각의 다리』가 “모두 4·19 과정에서 나타난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대립의 구도를 아버지와 아들/딸의 대립 구도로 치환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와의 단절을 표방한 ‘4·19세대’의 무의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김지미, 『4·19의 소설적 형상화』,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404~405쪽.)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딸의 대립 구도’가 ‘기득권 세력과 민중의 대립의 구도’라는 지적은 불완전한 해석이다. ‘아들/딸’이 민중을 상징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4·19세대’에 속하지 않는 이 작가들이 4월혁명을 통해 부각된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면서 이들의 위치를 설정하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더욱이 한무숙과 유주현은 아직 ‘4·19세대’ 문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므로, 이들의 텍스트와 1970년대에 발표된 이어령의 『환각의 다리』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성세대에 포함되는 이들이 시기에 따라 청년들을 어떤 구도로 이해하였으며 어떠한 문학적, 정치적 발언을 통해 혁명의 재구성 작업에 개입하고자 했는가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 작가들과 '4·19세대' 작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대론을 활용하더라도 전자는 기성세대와의 대비를 통해 대학생들을 역사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기성세대에 의해 그들이 성인임을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후자는 기성세대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서 스스로 주체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는 유주현의 『밀고자』<sup>34)</sup>와 한무숙의 『대열속으로』<sup>35)</sup>, 이광숙의 『어머니』<sup>36)</sup>이며, 후자를 가장 잘 드러내는 텍스트는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이다.

유주현의 『밀고자』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세대 구분 담론에 입각해 있다. 작가는 명구의 아버지를 “행정부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 설정함으로써 대결의 대상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승만 정권과 정부 관료임을 명료히 한다. 반성적 인물 명구가 “아버진 아버지, 나는 나, 독립된 인격이”라는 판단 아래 “실신한 낡은 세대와의 대결”을 꿈꾸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구도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새로운 세대란 혈연적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이성적 판단 아래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한편 『대열속으로』는 계급 갈등에 대한 한무숙의 정치적 상상력을 잘 드러낸다. 명수와 창수의 계급적 차이는 부정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구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아들이라는 세대론적 대립 구도를 통해 해소되는바, 계급차라는 절대적인 벽은 두 청년의 공유된 정신으로 마침내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광숙의 『어머니』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세대인 아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다. “무슨 까닭으로 이날밤 육은 여지껏

34) 유주현, 『밀고자』, 『사상계』 제94호, 1961. 5.

35) 한무숙, 『대열속으로』, 『사상계』 제101호(100호 기념 특집 중간호), 1961. 11.

36) 이광숙, 『어머니』, 『현대문학』 통권 제76호, 1961. 4.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며 전전긍긍하던 어머니는 정의로웠던 죽은 남편을 떠올리며 “인류의 역사는 용감한 청년들의 모험과, 의협심과 자기 희생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아버지를 쫓 뺐는” 아들이 “물에 빠진 여자, 도탄에 빠져 해매는 겨레”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결론내림으로써 아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그 “까닭”을 스스로 짐작해낸다. 그리고 육이가 “예전과 달라, 무슨 일을 어머니에게 얘기하기 전에 저 혼자 처리해버리”는 것은 “자신의 독자적 의견, 독자적 세계”를 만든 “어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어른같이 자신만만한 육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자신은 “제 할 일을 끝낸 사람”이니 “육의 존귀한 자유의사”를 “자기본위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는 어머니와 아들간의 정신적 분리 즉, 아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겨레’와 ‘어머니’는 남성들에 의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젠더화된 역할 구분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청년이었던 아버지와 청년이 된 아들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서사화되기 때문에 기성세대인 아버지를 재회복시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기성세대 중 일부와 청년과의 연대를 상상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37)</sup>

그러데 기성세대는 일반적으로 대결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지만, 청년세대들에 의해 재생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송병수의 『장인(掌印)』<sup>38)</sup>이 그 예에 해당한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 빠져 통

37) 선우휘의 『유서』, 『사상계』 101호(100호 기념 특집 중간호), 1961. 11. 역시 “작년 사월의 학생 『데모』에 몸을 다치고 입원”했으나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석에게 석의 아버지 현수인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산 청년이었던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청년세대와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38) 송병수, 『장인(掌印)』, 『현대문학』 통권 제67호, 1960. 7.

그림을 그리지 못하던 화가 민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힘에도 굴하지 않을 요동치는 격류”에 휩쓸리게 되며 주동자로 몰려 경찰에 잡혀가기에 이른다. 그리고 유치장 안에서 그는 “대부분이 스무살 안팎의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느덧 자신을 회복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갖 부당한 손바닥들에 굴할 수 없는 인간은 살아 있음을 증인(證印)하”고자 예전에 자신이 그린 화면의 공백에 “붉은 장인”을 찍는다. 여기에서 민의 재생은 청년세대의 정치적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세대론을 통해 청년세대를 승인하는 담론 작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대론적 관점을 취한 기성작가들은 대체로 혁명의 장소인 거리를 학생들의 활동 무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혁명에 참가한 다수의 하층민들을 후경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와 달리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에서는 학생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기는 하나 관찰자의 역할을 새로 부여받는다. 소설은 “1960년에 접어들자마자 일어났던 4·19사태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정직한 느낌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sup>39)</sup>는 주요 인물 나의 진술로 시작되며, “4월 19일의 데모가 일어난 지 벌써 엿새가 흐른 4월 25일”에 이 인물이 보고 겪는 일이 상세히 기록되면서 완성된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나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대학생 나와 친구 광득이는 일반적인 혁명 기록물에서의 청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리에 서 있다. 말하자면 혁명 서사에서 민중을 대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대학생들과는 달리, 『무너진 극장』에서 대학생들은 “인파로 가득히 메워져 있”는 “큰거리”에서 “부정부패와 학정에 대한 씻을 수 없는 혐오가 한 덩어리로 뒤엉”킨 “거대한 힘의 무게”에 휩쓸려 버린다. 주요

39) 박태순, 『무너진 극장』, 『월간중앙』 제5호, 1968. 9.



인물 나는 이 힘에 압도되어 “사람들의 성난 대열에 가입돼 버리”고 이들과 함께 “평화극장을 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슬에서 풀려 나온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극장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눈앞에 닥친 무질서에 환장해 버려서, 마치 사회와 인습과 생활규범을 몽땅 망각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물이나 내는 기괴한 탄성을 지”른다. 나 역시 “고고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크낙한 쾌감, 기막힌 흥분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 중에 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나는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참여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게다가 나의 참여는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의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에 압도되고 그 대열에 “가입돼 버리”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성작가들이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대학생들을 역사의 새 주체로 부각시키거나, 대학생들이 주도한 혁명으로 인해 기성세대가 재생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는 또한 시간에 대한 감각차를 발생시킨다. 기성작가들은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승인하는 서사 전개를 채택하지만, 박태순은 “인생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련이 도리어 그때로부터 출발되고 있었던 듯한 느낌으로” 혁명이 “의연히 계속 진행중임”을 확인하면서 미래의 시간성 안에 혁명의 시간을 밀어 넣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혁명은 1960년 4월 26일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혁명을 주도하는 자들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유동적이고 미확정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관찰자인 내가 “고귀한 무질서가, 미래에 있어서는 고귀한 자유, 고귀한 행복, 고귀한 가치로 축조 건설되리라”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 타종의 울림을 새로운 세대였던 우리가 거느리고 나타날 수 있었음”을 감격스러워할 때, “새로운 세대였던 우리”에는 당시의 대학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즉 박태순의 세대 감각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역사에 주체적으로 개입한 다수를 향해 열려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작가의 세대 의식은 착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의 주체를 민중 속에서 발견하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의식과 자신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의 역할에 대한 긍정이 중재되지 못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너진 극장」이 1968년에 발표된 소설이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4월혁명에 대한 해석 방식이 재검토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자 그에 대한 답변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세대론을 활용한 대학생 중심의 혁명사가 민중들의 혁명사로 재해석, 재구성되는 과도기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3. ‘그/녀들’이 소거되는 방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대학생들을 혁명사의 중심에 놓는 작업은 청년들의 대립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대립항은 기성세대였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주도한 혁명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립항이 요청될 수밖에 없으며 시위에 참가한 군중들은 그 순위순 선택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익명성과 소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군중들을 청년들의 배후에 위치 짓거나, 평화(비폭력)와 폭력, 합법과 불법을 둘러싼 담론화 작업을 통해 혁명의 이념을 훼손시키는 군중들을 혁명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당시의 대학생들은, “국공립사립대학으로부터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생수” 17,329명 중 1만 4천여 명이 군입대하였고, “여자졸업생 약2천명을 제외”한 “사회진출인원수 2천여 명의 취직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예상되고있다.”<sup>40)</sup>는 기사에서처럼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었기 때

문에, 경제면으로나 외관상으로나 도시의 하층민과 쉽게 구분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도시빈민들을 분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선 청년들과 남루한 옷차림을 한 빈민들을 대조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선택된 방법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평화적 시위를 내세운 반면 낡은 옷을 입은 도시 빈민들은 파괴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무지하고 빈곤한 자들의 참여를 혁명의 오점으로 형질 전환시켜 기록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비판자이자 민중의 대변자로 자처했지만, 민중들의 요구를 실제로 반영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이 내세운 4월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의제인 부정 선거 규탄과 재선거 요구는 국민국가가 국민주권에 입각해 채택하는 근대적인 대의제의 전제, 즉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sup>41)</sup>을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등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듯한 이 형식적 평등 속에는 실질적 불평등이 내재해 있었다. 즉 혁명의 주도세력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합법성이 유지되는 영역에 머무는 것은 근대 정치가 작동되는 바로 그 방식, 즉 국민주권이라는 가정이 실제 현실처럼 보이도록 대중을 훈육하고 규율화함으로써 대중 스스로 현실적 불평등을 민족/국민 속의 평등으로 상상/치환하게 하는 방식<sup>42)</sup>에 부합되는 것이다. 혁명을 주도한 대학

40) 『금년도 대학졸업생 거의 입대하고 실제사회 진출은 2천명 내외』, 『조선일보』, 1958. 1. 24, 조간 1면.

41)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역사』 제37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7쪽.

42)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 38쪽 참조. 단, 황병주는 인민주권론에 따라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주권 대신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인용하면서 국민주권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참고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은 주권적인 공동체와 공동의사의 구성 및 형성면에서 서로 상이한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국민주권론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전체가 대표를 통해서 스스로 현상하는 과정으로 국가를 이해하고, 인민주권론은 개별이고

생들의 선언에 나타나는 이념적 기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였으며 이들의 선언문 어디에도 정치, 사회, 경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주장은 나타나지 않는다<sup>43)</sup>는 지적처럼, 국민주권의 형식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으로 인식되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은 불충분했던 것이다.

---

구체적인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 국가를 상상한다. 전자에서 개인은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이해되지만, 후자에서 개인은 능동적 시민으로서 단체의사를 형성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 그 점에서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헌법은 기본권을 참여권적 성격으로 이해한다.(김명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95~96쪽 참조.)

그러나 남한에서는 인민주권론이 아닌 국민주권론을 채택하였다. 서구에서 국가에 선행하는 인간 보편 개념으로서의 ‘인민(people)’과 국가를 매개로 재규정되는 ‘국민(nation)’ 개념은 공존하는 것이지만, 1945년 해방 후 한반도에서 좌우대립이 심화되면서 인민 또는 인민과 연관된 용어는 금기어가 되었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인민주권론’의 영향으로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이 아닌 ‘인민’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헌법초안에는 “국가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총강 제2조)”고 명시하였다. 국가에 선행하는 권력의 원천을 ‘인민’으로 파악하되, 그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국민’은 법률에 의해 그 요건을 정하는 논리적 수순을 밟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헌법에서 ‘인민’은 배제되고 ‘국민’ 개념이 채택되었다.(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제144호, 한국한국사연구회, 2009, 76~82쪽.)

그 점에서 4월혁명 당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때 국민보다는 시민이 더 선호되었던 것은 당시 주체 구성 담론에서 국민은 국가에 종속된 인간으로 표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법적 규정으로만 보면 의미상 차이가 크지 않은 국민과 시민을 분리하려고 애썼다. 이들이 시민에 부여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도 국가와 분리되어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는 자율적 존재인 근대적 개인의 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와 협상하거나 국가 정책을 비판하고 그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이자 국가와 사회 발전을 책임진 존재로서의 시민에 대한 관심이 이들로 하여금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인 대학생들을 특별히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김미란,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제29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7, 261쪽.)

43) 김수진, 『제2공화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백영철 편, 나남출판, 1996, 165쪽.

물론 1950년대 지식인들의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주주의의 담론이 오직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하층민들은 국민, 공민, 인민, 민중, 백성 등으로 불리면서 지성으로 무장한 근대적 개인들인 지식인들의 계몽 대상으로 규정되었을 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점에서 혁명의 주동세력들이 민중의 이름을 빌리면서도 민중적 원칙에는 무관심한 것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에게 민중은 해석과 동원의 대상이지 행위의 주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빈민들은 당면한 민생 문제가 아닌 공정 선거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자유주의적 정치 담론 속에 휩쓸렸고<sup>44)</sup>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민주당의 선거 구호를 혁명의 거리에서 제창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를 가까스로 투입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파괴적 행위로 표현했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은 경찰서와 관공서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된 원인이 되었다.

습격 대상이 경찰서와 관공서라는 것은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

---

44) 주체화되지 못한 기층민들은 4월혁명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들의 언어를 남기지 못했다. 혁명의 와중에 희생된 덕성여중 2년 최신자양의 어머니 오준선은 회고록에서 “3·15선거가 있기 훨씬전부터 시장의 화제거리는 장사일을 빼놓고는 온통 선거에 관한 것이었”으며 “각자마다 말하는 내용이나 이야기거리는 달라도 일치하는 점은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린다. (『딸은 죽어도』, 앞의 책, 학민사편집실 편, 255쪽.) 이처럼 4월혁명에 대한 회고는 당대의 정치적 쟁점인 부정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주열의 형인 김광열처럼 “아직도 이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비밀비재하”고, 현 박정희 정부는 “대중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며 “하층시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회고록은 매우 드물다. (『마산 데모와 나의 동생 김주열』, 위의 책, 265~266쪽.)

를 띤다. 그러나 도시빈민들의 폭력은 수시로 학생들의 평화 시위와 비교되었다. “학생들의 흥분은 절정에 달하고 대렬은 결사적인 전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경찰방어선을 뚫고 2만여명의 학생이 노도와 같이 경무대쪽으로 밀려 들어갔다.”와 “이무렵 데모대에 섞였던 남루한 의복을 입은 청소년 약 3천명이 갑자기 중앙청 돌담을 뛰어 넘어 문교부와 부흥부 청사를 마구 때려 부수는 한편 부흥부 앞에 세워놓은 차량 10여대를 부수어서 덮어놓고 뒤뜰에가서 문교부장관차등 6대를 파괴하였다. 완전히 폭력화한 이들은 『중앙청등사실』을 부수고 수만매의 종이를 뿌려 던졌으며 문교부 『영화검열실』도 때려엎었다.”<sup>45)</sup>와 같은 자극적인 대비 방식의 서술을 통해 군중들은 시위 기간 내내 파괴적인 폭동자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때로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불량자들의 행위로 의도적으로 오역됨으로써 은폐되기도 하였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오는 4월 18일 밤 고려대학교에 모인 시위대들이 “소규모의 무장기동대화”한 것에 대하여 “이날밤 데모대속에 학생은 섞여 있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학생들의 행위를 폭력과 구분하고자 했던 것이다.<sup>46)</sup> 그런 점에서 폭력적인 도시 하층민들이 배제되는 방식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을 충실히 따른다.<sup>47)</sup> 하층민들을 위기를 창출하는 도시의 불량배들로 타자화시키고 폭력을 이들의 존재론적 속성으로 만드는 것은, 혁명기에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에서 이들을 추방시킴으로써 지식 청년들의 행위를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 되는 것이다. 곧 위기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청년 세대들이 강조한 시위의 정당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셈이다.

반면 대학생의 행위가 폭력임을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할 때는 정당성

45)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91쪽.

46) 위의 책, 105~106쪽.

47)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88, 2, 3장 참조.

을 결여한 폭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적 행위)과 정당성이 있는 폭력(법적 인정이 가능한 행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평화적 시위와 폭력이 분리되면서 폭력의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학생들 역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의 규칙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sup>48)</sup>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폭력을 구분하는 권한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 해당할 터이다.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발표 직후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질서 회복 운동은 도시빈민들을 ‘공공기물의 파괴자’로 공공연하게 낙인찍는 데 한몫하였다. ‘4·19의 영웅들’은 “『데모의 깃발을 거두고 내일을 생각하자』는 냉정하고도 정열적인 판단아래 거리마다 『국가재산을 보호하자』는 스로간을 내걸고 마이크선전차를 몰고다녔으며 데모군중의 전부를 저물기전에 모두 집애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들은 계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헌병들과 함께 26일밤 각 경찰기관에 배치되어 “마비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 경찰치안”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발데모에 자를수습으로 종시 유종의 미를 거둔 대학생들”에 의해 27일밤에는 “잠음이 깨곳이 씻겨지고 말쑥이 차려진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되었다<sup>49)</sup>는 진술에서 우리는 “냉정하고도 정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폭력배들은 청년세대가 수립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무법자들이 되었음을 본다. 비제도적 차원에서 저항이 일어난 정치적 공간은 보호해야 할 국가 재산이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전환되었으며, 공간의 의미 전치를 통해 저항의 한계선이 확정됨으로써 ‘불법적인’ 폭력은 철저한 거부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폭력의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폭력의 사용자가 아니라 폭력의 대상이며, 인간은

48) 폭력의 국가 독점과 저항의 규칙에 대한 합의를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설명한 조희연·조현연, 앞의 글, 49쪽 참조.

49)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202~203쪽.

폭력이 마치 자기에게 가해지는 것처럼, 즉 자신을 피해자처럼 연상할 수 있어야 비로소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sup>50)</sup>면 당시에 하층민들의 폭력에 희생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으로 상상되었다.

그 점에서 국가 재산을 보호하자는 구호는 당시 학생들과 치안 유지자들, 이를 유포하고 담론화한 신문기자와 같은 당대 지식인들의 이념적 지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서와 관공서가 더 이상 분노의 표출 대상이 아닌 국가 재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국가의 공적 권위 회복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로 인해 공공 영역은 더 이상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면서 국가와 충돌하고 협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규율되는 공간으로 재영토화되는 것이다. 국가의 폭력에 기초한 강제력인 공권력은 원리적으로 전사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산인 경찰서와 관공서는 ‘공’의 구체적, 사회적 표현<sup>51)</sup>에 해당한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범법자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비시민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소유로서의 공유와 국가의 소유로서의 국유는 확연히 구분되지만,<sup>52)</sup> 혁명의 주도세력은 국가의 소유를 대중의 사회적 소유와 통합시켜 이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자신들의 권한을 반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무지한 하층민들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도 혁명의 서사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사례는 『무명기』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소설은 신문기자들이 혁명의 전야에 강패들이 고려대학생을 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

50)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23쪽.

51) 황병주, 앞의 글, 27쪽 참조.

52)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 19쪽 참조.



계천의 한 대포집에서 대기하는 상황에서 “하루 품팔이에 지친 막별이 군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된다.

「자네, 우리같은 막별이 노동군들에게 산다는게 뭔지 아냐? 다만 킁킁 하게 목을 추겨주는 대포 한잔에 그날 그날을 걸고 살아가는 거라네.」

「글세 그날 그냥 대포 썬거리라도 있기만 하다문야 오죽 좋겠나.」

「미친 소릴랑 줌들 작작하게. 지금 마산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줄 이나 아냐?」

「제기랄! 밤낮 속아산 우리넌데 선거를 올바로 하면 누가 우릴 공으로 뵈여준다던가?」

「잔말 말고 자네들 손이나 믿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건 우리들 손 뿐이라네. 거칠대로 거칠어지고 못이 박혔어도 이 놈의 손이 그래도 여직껏 내 입에 풀칠을 해준걸세.」<sup>53)</sup>

텍스트에서 이 대화는, “그 어디선가 알 수 없이 깊은 심연으로부터 있어야 할 세계가 피어오르는 그 벽찬 숨결 소리를 견딜 수 없이 조마로히 기다리고 있”는 두 명의 젊은 신문기자들과는 달리, “정체된 공간”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술만을 들이키는 ‘막별이 노동군들’이 나누는 두서없는 이야기로 규정된다. 이 삽화 이후에 제시되는 서사는 “불법, 공갈, 협박, 사기가 뒤범벅이 친 3·1정부통령선거를 규탄하는 제1마산사건에 뒤이어 제2마산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취한 민중 적대시정책과 야수적인 보복정책에 분격한 학생”들이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교문을 박차고 가두로 진출”해 시위를 벌이는 긴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건의 관찰자이자 기록자인 신문기자 최준은 종로에서 광화문, 경무대에 이르는 학생들의 시위 경로만을 좇으며, 이로 인해 혁명의 서사는 학생들의 투쟁의 서사로 고착된다.<sup>54)</sup> “정치적인 광장”에

53) 오상원, 『무명기(연재 1회)』, 『사상계』 제97호, 1961. 8, 328~329쪽.

서 데모대원들이 “성난 물결과 같이 뽀얗게 먼지를 날리면서” 경무대로 밀려가자 “연도에 늘어선 수만 군중들”은 “갈채를 보내고 정차한 버스와 전차 그리고 고층건물의 창가”에서 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터뜨린다. 시민들은 청년들의 배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내의 전대학생들”이 밤이 되자 “내일을 기하여 대대적인 데모로 돌입할 기세”를 보이며 흩어지는 것과는 달리 “하루살이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누가 맞아 죽건 누가 집권을 하건 아랑 곳이 없이” 혁명의 거리를 순식간에 좌판을 늘어놓은 길거리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마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최준을 통해 “그들에겐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따위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생활에 직결된 산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도시빈민들이 혁명의 주체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포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그 점에서 작가가 시위가 과열됨에 따라 학생 데모대에 “일반 시민들, 구두땀이 꼬마들, 허름한 옷차림의 실업자들”이 끼어들어 데모대가 “혼돈”되어 버리는 장면을 그리는 것은 자세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데모대가 ‘혼돈’되면서<sup>55)</sup>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4월혁명사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들과 선명하게 분리시키는 서

54) 당시 신문 기사나 수기 같은 혁명 기록물들, 문학 텍스트들은 거의 전부가 학생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혁명의 서사를 전개했다. 이는 신동문이 “서울도/ 해숫는 곳/ 동쪽에서부터/ 이어서 서 남 북/ 거리 거리 길마다/ 손아귀에/ 돌 벽돌알 부릅권 채/ 떼지어 나온 젊은 대열/ 아! 신화같이/ 나타난 다비데군들”에서처럼 서울의 전지가지를 모두 혁명의 거리로 표상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신동문, 『아-신화같이 다비데군들』, 『사상계』 제83호, 1960. 6, 353쪽.) 소설에서도 매우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가 발견되는데, 김경환의 『지옥변』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공간은 대학생들의 활동 범위 혹은 시위 경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지만, 『지옥변』의 공간 배치 방식은 이와 다르다. 도시 빈민들의 거리 진출을 다룬 이 소설에는 익명의 소도시 거리만이 등장한다.

55) 당시에는 ‘혼성데모대’, ‘혼합데모대’라는 표현이 쓰였으며(현역일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131~132쪽.) 이는 특히 순수한 학생들의 평화 시위와 난폭한 군중들의 폭력 행위를 구분하는 데 이용되었다.

사 전략이다.

이때 청년 몇이 달려오며 이들을 급히 제지하였다.

「우리는 파괴를 위하여 데모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학생데모대원들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부수던 측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낸 세금이란 말야. 재놈들 이따위 차타고 다니라 세금을 낸줄 아나. 그러니까 상관 없단 말야.」

「그렇다고 부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으. 곧 이것은 우리의 재산인 동시에 국가의 재산이란 말이요. 타고 다닌 놈이 나쁜 놈이지 이 차를 때려 부셔서 그래 어떻게 하잔 말이요? 더욱이 이 속엔 ⑤인 외국인 차들이 있지 않나 말이요.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위신을 생각해야 될게 아니요.」

「외국인이고 뭐고 말야. 원조물자 가져다 놓곤 고관들과 끼고 자기네끼리 다 해먹었지 우리한테 손바닥만한 밀가루 떡 하나 줘나 말야. 얻어 먹었다는 건 먹다 담배 꽂지가 기어나오는 꿀꿀이 죽 뿐이 아니었던 말야.」

「그러나 그러한 화풀이를 하자고 우리가 데모를 하는 건 아니란 말요.」

「제기랄! 그럼 요담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공으로 먹고 살게 해준 다던가? 배고픈 놈에겐 감정밖에 남을게 없단 말야.」<sup>56)</sup>

당시 시위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 진압에 흥분한 학생들 역시 무작위로 공공기물을 파괴하였지만, 파괴 행위는 “감정밖에 남을게 없”는 도시빈민들의 “화풀이”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학생들의 평화적인 투쟁과 무자각한 하층민들의 몰지각한 파괴 행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극히 이례적으로 도시빈민에 속하는 신문사 소재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연희의 『개미가 쌓은 성』<sup>57)</sup>에서도 장서방이 외치는 것은 “경무대 가자……. 폭정은 이적이다.”라는 학생들의 구호이다. 하지만 “데모

56) 오상원, 위의 책(연재 3회)100호, 1961. 11, 416~417쪽.

57) 박연희, 『개미가 쌓은 성』, 『현대문학』 통권 제89호, 1962. 5.

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나는 아내의 말에 “삼일오 부정선결 다시 하라는 거요. 정·부통령을 새로 뽑자고……. 이견 이승만과 이기붕이 몰러나라는 말이요. ……그 놈들이 몰러나면 민주주의가 잘 돼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단 말오”라고 하는 장서방의 발언이나, 이승만의 하야 성명을 듣고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의 기자에게 그가 “인제 없는 사람도 잘 살게 될 것 같소?”라고 묻는 데서 이 소설이 하층민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폭력 혹은 무질서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는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민중 담론의 영향을 받은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에서 유일하게 보여줄 따름이다.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소설에는 “사슬에서 풀려 나온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극장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눈앞에 닥친 무질서에 환장”한 사람들이 등장한다.<sup>58)</sup> 텍스트에서 이들의 극장 파괴 행위는 “관람석을 분해시켜 그곳의 효용가치를 파괴시키는 무질서에의 작업을 열렬한 흥분 속에서 감행하”는 것이며,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제멋대로 부정을 자행하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질

58) 평화극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당시 기록은 찾기가 쉽지 않다. “『평화극장』에 불을지르려는 『데모』대를막기위하여 이중삼중으로방어선을치고있는 군인들에게물결같은 『데모』대가닥치자 공포에질린 농촌출신군인들은 『탱크』로『데모』대를밀면서 기관총을발사 마침내는 일명이 『탱크』에깔려 머리가파열되고 최소한5명이관통상을입었다.”(『종로일대 경관철수』, 『동아일보』, 1960. 4. 26, 3면.)처럼 시위대와 군인들의 충돌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지만, 이를 간략하게 보도한 기사만 드물게 눈에 뜨일 뿐이다. 따라서 군인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와 시위대를 진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군인들과의 충돌이 있긴 하였지만, 당시 시위대에게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한 자들은 경찰이었지 군인이 아니었다. 게다가 군인들은 시위대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시위를 방관하기도 했기 때문에 혁명 당시 시민들은 이들에게 상당히 큰 호감을 보였다. 그 점에서 주요 인물 나가 군인들에게 극장 안에 숨어서 “사살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는 것은 사실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등장 후에 군인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서를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들의 “원시인들과도 같이 꺾꺾 고향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는 행동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애로의 해방상태”로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해방상태는 “이런 도취,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자 “연극놀이”이다. 그리고 이는 “비참한 상처”와 “파괴된 폐허”에서 “우뚝 그 밝음을 드러내”는 “새날의 출발”을 위한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이성과 비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폭력을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으면서 폭력배들을 규탄하고 공적 역사에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폭력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대항적 힘의 행사”라는 구별, 즉 “힘의 행사를 질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비판적 의도”<sup>59)</sup>가 담겨 있다. 하지만 작가가 폭력을 무의식적인 행위로만 이해하고자 함에 따라 지배의 유지를 위한 강제력에 반발하는 계획적인 힘의 행사<sup>60)</sup>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 역시 존재한다.

그런데 기성작가들의 소설과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에서 공통되는 점이 발견되며,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자들은 남성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폭력 행위는 남성들의 폭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들의 폭력 행위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들은 폭도로도 간주되지 않았다. 혁명의 기록자들은 독자의 시각을 붙잡기 위해 단발머리, 흰 한

59)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산문출판사, 2007, 7쪽.

60) 위의 책, 8쪽 참조.

복 등과 같은 여성의 외양 묘사에 주력했으며, 또한 이들의 행동을 늘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현상으로 취급하려 했던 것이다.<sup>61)</sup> 여성들의 참여는 혁명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삽화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혁명은 남성들의 정치였던 셈이다. 4월혁명 당시 소녀들의 과격한 시위 행위도 있었지만, 신문에서는 3면의 하단에 『소녀 등 5명 광주서 구속』이라는 제목을 단 1단 기사로 이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기사 제목만으로는 소녀들이 왜 구속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십이일 광주경찰서는 김숙양등 오명을 소요 및 계엄법위반으로 정식구속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지난 19일 『데모』에 참가하여 기물을 파괴한 혐의라고 한다.”가 기사의 전문(全文)이다. 기사의 내용상이 소녀들은 학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점은 학생들과 달리 이 소녀들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이들의 폭력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 행위가 성차뿐만 아니라 계급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매춘여성들의 시위를 다루는 경우에 가장 잘 드러난다.

3·15 의거 당시 마산에서는 “뜻있는 여학생들”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흥등가의 여인들도 합세했”다는 진술을 참조할 때,<sup>62)</sup> 4월혁명에서도 매매춘여성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1)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단발머리를 한 숙명대학교학생 『김종자』양이 앞으로 뛰어 나와 『선거를 다시하자』는 푸라카드를 양손에 쳐들고 목메게 외쳤다. 데모 대는 김양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부르고, 연번 시민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현역일 선기자동인 편, 앞의 책, 931쪽.)나 “이리저리 탱크를 피하면서 비켜서지를 않고 있던 군중은 갑자기 소복여인이 탱크 위에 기어올라 『만세』를 부른것을 계기로 삼시간에 탱크에 기어올라 탱크의 자유를 묶어버렸다. 수만 군중으로 부터는 우뢰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위의 책, 127쪽.)가 그 예에 해당한다.

62) 『특집 좌담: 3·15 당시의 학생들에게 듣는다』, 『3·15의거』 제2호, 3·15의거기념사업회, 1994. 4, 36쪽.

그러나 3·15 의거나 4월혁명을 다룬 당시의 기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결코 중요한 사실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특히 하층민 여성들의 참여는 혁명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혁명 후에도 매매춘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이것은 결코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때로는 그 진의도 의심받았다. “모든유행이 「파리」에서 시작되듯 「데모」의 발상지 대구에서는 지난 6일 흥등가의 아가씨들 7, 8명이 떼를 지어역전 파출소로 몰려들”어 고향으로 보내달라면서 “악질 포주의 착취밑에 억눌린지 수개성상 이젠 혁명도 끝났으니새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순경아저씨들은 호주머니를 털어노자를 마련해 주었다”는 기사의 마지막에 “헌데과연 「내고향」으로 갔는지 「남의고향」으로갔는지?”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sup>63)</sup> 물론 한 기사는 비록 「가두에 나선아녀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지만, “부산 시내 초량동에있는 세칭 「텍사스」(일명양아가씨촌)마을의 오백운 락여성들은 “사람위에 사람없다”는 인권표어를내어들고 「데모」 「빠라」 살포등방법으로 그들의인권옹호투쟁을일으켰다”<sup>64)</sup>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신문의 제일 하단에 1단으로 처리된 반면 신문의 상단에는 「규탄의 횃불전국에!」라는 제하에 “반혁명세력규탄 「데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6단 기사<sup>65)</sup>가 실려 있다. 말하자면 전자를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행위로, 후자를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로 설명하는 기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매매춘여성들의 시위를 혁명의 일부가 아닌 ‘그들만의 시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혁명의 현장을 남성들의 정치 무대로 한정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혁명 담론

63) 「귀향가부른여성인데모」, 『경향신문』, 1960. 6. 10, 3면.

64) 「가두에 나선아녀들」, 『경향신문』, 1960. 7. 23, 3면.

65) 「규탄의횃불전국에!」, 『경향신문』, 1960. 7. 23, 3면.

이 성차와 계급차에 기반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차이를 전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sup>66)</sup>

하지만 소설 텍스트는 신문 기사나 수기 등과 같은 혁명 기록물보다도 더 인색했다. 여성 인물들의 혁명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가령 『용암류』에 등장하는 여대생 수경은 4월혁명에 참여하러 떠나는 동훈에게서 “무엇인가 요긴한 것을 피하지 말자 수다한 여자들이 애기를 낳고 애기를 기르며 그렇게 살아 가고들 있다. 너도 그런 여자의 범주에 불과하다. 추호도 다르지는 않다,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다.”<sup>67)</sup>라는 말을 남긴다.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위해서이며 아이를 낳는 것은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적 역할 분담은 여성의 영역을 가정에 한정시키는 일이다.

남정현의 『너는 뭐야』<sup>68)</sup>는 여성에 대한 그보다 더 심한 비하를 보여준다. 집안 누구에게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대학 출신 지식인” 관수가 집을 버리고 나왔을 때 “상점은 상점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좌우간 눈에 보이는 문(門)이란 문은 모조리 단결한듯 한뜻으로 꽁 닫혀 있”으며 “문을 잠그고 집을 나”온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탄전을 피는 법이 없이 똑바로 앞으로 향하여 부지런히 걷”다가 네거리에서 모여 “피를 토하는 듯한 아우성”을 치는 시위 현장을 발견한다. 하층민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사람 대접을 해라! 너만 살면 제일이야!”라는 구호를 외쳤고 “원시적인 사자후의 함성”을 따라 관수는 대열에 끼어든다. 그리고 시위대에 가담하면서 관수는 자신의 인간됨을 되찾는바, 이 과정은 회사의 여비서로 있는 아내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식모를 속물로 격하시키는 방

66) 김미란,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53~54쪽.

67) 이호철, 『용암류』, 앞의 책, 284쪽.

68) 남정현, 『너는 뭐야』, 『사상계』 제99호, 1961. 11.



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점과 공장의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과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아내와 식모를 대비시킴으로써 당대 여성의 삶이 허영과 무위에 가득 차 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매매춘여성의 시위 참여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소설도 존재한다. 혁명의 후일담에 해당하는 한문영의 『움직이는 창』<sup>69)</sup>에서 주요 인물 나는 4월혁명 당시 “새롭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섰으나, “새 공화국은 출범부터 난항이었다.” “하루가 데모에서 시작되어 데모로 저물어 갔”고 “직공들의 스트라이크는 학생에서 간호원들에게까지 번져갔”으며 “침들에게 남편을 빼앗긴 부녀들마저 광화문 네거리에서 치맛바람을 날렸다.” 이것은 내가 “점점 데모를 기피하고 현실을 회의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다. 그런 나에게 “나도 데모 해봤어요. 참 재미 나더군요. 왜 한줄 아세요? 『우리도 사람이다. 비록 웃음을 팔고 살지만 우리도 사람이다. 남자들은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우릴 강요하지 말아라!』 어때요? 재미나죠?”라고 묻는 매매춘여성은 혁명의 이상을 훼손하는 최악의 여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당대의 성차와 계급차에 기반한 혁명의 담론화 작업이 미친 사회적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이는 저명한 여성 사회학자 이효재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혁명이 25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녀는 당시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을 타도하는 데모대열에 일부 여학생들이 참여, 사상자 명단에 소수가 끼긴 했지만 이것은 여성계의 집합적 의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보다 개인적 참여에 불과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여성들이 ‘4·19의 방관자’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70~80년대를 통하여 대학, 길거리, 노동현장, 감옥 등에서 인권·민권을 주장하며 투쟁해 온 젊은 여성세대”가 “4·19정신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함으로써<sup>70)</sup> 의

69) 한문영, 『움직이는 창』, 『신동아』 제71호, 1970. 7.

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4월혁명에 참여한 수많은 여대생들과 하층민 여성들을 역사에서 소거시키는 담론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혁명사는 이름 없는 ‘그들과 그녀들’의 참여 행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세대는 1960년대의 주역으로 호명되었던 것이다.

#### 4. 마치면서: 그/녀들은 어디에 있는가—민중의 발견

당대의 정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을 혁명사의 중심에 위치 짓고자 한 것은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혁명의 목표를 국민주권의 회복에 맞추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주권 행사의 주체’로 상상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주권 실현의 유일한 방법으로 재선거를 요청하는 것은 실제적인 동등한 시민권을 열망하는 것이라기보다 형식적 평등의 제도적 실현을 추구하는 일이다.<sup>70)</sup>

물론 당시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주체형성의 초기단계<sup>72)</sup>였으므로 민중은 겨우 학생들의 시위에 동원될 준비만 되어 있었다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학생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이 혁명에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고 짐작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오히려 실상은 하층민이 통제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상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폭동에 대한 공포는 만연해 있었으며,<sup>73)</sup> 정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은 폭력과 비폭력의 이분법을 적극적으

70) 이효재, 『여성과 4·19』, 『실천문학』 통권 7호, 1985년 여름호, 306~307쪽.

71) 찰스 테일러,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0, 177쪽 참조.

72) 정기영, 앞의 글, 110쪽.

로 활용해 이들을 통어하면서 혁명의 방향을 조절해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사회질서의 회복을 호소한 4월 26일 이후에도 도시 하층민들의 ‘일탈’은 계속되었다. 시국대책위도 “공공기관이나 시설및사유재산을파괴하는지는 신생자유대한을파괴하는 범법자요반역자”<sup>74)</sup>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의 ‘난동’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시경에서도 “평화적 시위는경찰이 보호할것이나 관공서에 난입하는등 난동을 부리는지는 현장에서 체포할방침”<sup>75)</sup>임을 밝혔으나, 여전히 폭력을 동반한 시위는 빈발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들은 “26일부산에서 『데모』대어가담하였다가 마산까지몰려갔던 『깡패』”로 규정되고, “마산 밀양창녕등지를휩쓸어각경찰서와자유당사옥및여당인사집들을 무차별과괴방화및 약탈행위를 감했”하다 “출동한 군인에게 일당타진되어 부산지구로 압송중에있다”<sup>76)</sup>는 기사에서처럼 군인들에게 일당타진되는 ‘적’처럼 묘사되었지만, 지식인들의 담론 통제 작업에 불박이지 않고 주저 없이 자신들의 분한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이 해야한 지 10여 일 만인 1960년 5월 1일에, 거창양민 학살사건(1951년)의 유족들이 당시의 면장을 타살하여 불태워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sup>77)</sup> 이것은 하층민들의 분한이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후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동쟁의와 농민운동은, 1960년대 후반 ‘민중의 발견’ 작

73) ‘비엘리트층의 분출하는 열정’에 대한 ‘이미 형성된 사회적 불안’을 지적하면서 ‘혁명과 혼란의 경계’에 대해 논하고 있는 흥미로운 글로는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4·19와 모더니티』, 우찬제·이광호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0)을 들 수 있다.

74) 『과괴행동의중지』, 『동아일보』, 1960. 4. 29, 1면.

75) 『난동하면 체포』, 『경향신문』, 1960. 6. 1, 3면.

76) 『86명을압송중 데모편승한깡패들』, 『동아일보』, 1960. 4. 29, 3면.

77) 이에 대해서는 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II』, 173쪽.

업을 통해 자신들의 주체적 역량을 인정받는 길을 여는 데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저항세력은, 4월혁명의 성과를 전유하면서 억압적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중 개념을 정립하고 민중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바 있다. 이는 비록 산업화 초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온건한 개념 범주 및 내용을 담고 있었고, 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정치사회적 의미연관을 갖는 정치사회적 범주로 재구성되지만,<sup>78)</sup> 4월혁명 직후부터 쏟아진 민중들의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질서 회복을 부르짖으며 폭력적인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해산시키고자 했던 대학생들은 5·16 군사혁명 후 더 이상 성인이 아니라 “거리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던” 미성년자로 낙인찍힌다. 이들은 “사회를 익숙히 알지 못하고 능란히 적응치도 못하면서 자기간에는 완숙된 어른으로 자처하고 청신한 신세대로서 자기주장을 고집하”는 청년기에 속하는 존재로 간주되며, 4월혁명과 같은 “공격적 행동”은 “그들 특유의 정서적 불안정성이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담론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기에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들의 “억눌릴 대로 억눌린 감성”은 “4·19라는 법석소동으로 출구를 찾았”지만, “무절제하게 법석을 부리게 된 책임”도 지지 못하다가 5·16으로 안정감을 얻”고 학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sup>79)</sup>는 식의 해석이

78) 박명림,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한국과국제정치』 제24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년 여름, 249~250쪽.

79) 김성태, 『5·16 이후의 청년심리』, 『사상계』 제107호, 1962. 5, 217~219쪽. 학생들을 미성년으로 격하시키는 논의는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장준하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수유리의 4·19묘지에 갔”다가 “그 185위의 묘중 어찌 단 하나의 어른의 묘도 없이 한결같이 모두 젊은 학생들의 묘뿐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음을 토로하면서 “죽은 학생들의 수효만큼 어른들-소위 지도자, 교수, 정치인-도 죽

생겨나면서 4월혁명과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는 철저하게 뒷받침한다. “혁명정부의 경제개발이란 과업은 전국민의 비장한 각오없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도농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국민재건운동”을 통해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신운동”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sup>80)</sup> 이 시기에 새로 수립되었던 주체는 산업화에 동원될 ‘국민’이었으므로 혁명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담론 작업의 수행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4월혁명을 주도한 ‘젊은 사자들’은 이 시기에 중산층이 되어 조용히 기존 질서에 흡수되었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집단적인 언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신들의 폭발적인 정치력을 보여주게 된다.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 역시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주목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

을 수가 있었던들 오늘날의 이 나라 형편이 이렇게까지야 될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의 철면피들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고백한다.(장준하, 『죽음에서 본 4·19』, 『기독교사상』 통권 제167호, 1972년 4월호, 80쪽.) 장준하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4월혁명이 장기간에 걸친 투철한 민중혁명이 아니라 단기간에 발생한 학생혁명이었기에 완전한 혁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 민중의 혁명’을 주장하기 위해 동원하는 전략은 김성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4월혁명 직후에 발행된 『사상계』의 『권두언』에서는 “4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인 이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었다고 서술하면서 대학생을 지식인으로 격상시켰지만, 이제는 “어린 학생들만을 제물로 바친 절름발이 혁명이었기 때문에 참 혁명”이 되지 못하였으며 “어른들은 마땅히 죽음으로 그 어린 자식들의 핏값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들을 성인에서 미성년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이다.(위의 글, 84쪽)

80) 성창환, 『계획성패의 관건은 내조달에 있다』, 『사상계』 제105호, 1962. 3, 210쪽, 214쪽.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소년동아』, 『대학신문』, 『사상계』, 『현대문학』, 『월간중앙』

### 2. 단행본

강만길 외,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98쪽.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23쪽.

박수만 편, 『사월혁명』, 사월혁명동지회출판부, 1965, 399쪽.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 1996, 210쪽.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I』, 1990, 한길사, 124~127쪽.

\_\_\_\_\_,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II』, 1990, 한길사, 127쪽.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역사비평사, 2007, 269쪽.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156쪽.

학민사편집실 편, 『4월혁명자료집: 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304쪽.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89쪽.

현역일선기자동인 편, 『4월혁명-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창원사, 1960, 29쪽.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산ন출판사, 2007, 7쪽.

찰스 테일러, 이상길 옮김,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2010, 177쪽.

### 3. 논문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4·19와 모더니티』, 우찬제·이광호 엮음, 문학과지성사, 2010, 222~261쪽.

김명재,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85~106쪽.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160쪽.

- \_\_\_\_\_, 『시민-소시민 논쟁』의 정치학-주체 정립 방식을 중심으로 본 시민·소시민의 함의, 『현대문학의 연구』 제29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7, 255~285쪽.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 제144호, 한국사연구회, 2009, 69~95쪽.
-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혀진 여성의 서사들』,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4·19혁명과 여성』, 한국여성문학학회 외, 2010. 4. 17, 35~49쪽.
- 김지미, 『4·19의 소설적 형상화』,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집, 한국현대문학회, 2003, 385~425쪽.
-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제200집, 역사학회, 2008. 637~663쪽.
- 박명립,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한국과국제정치』 제24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년 여름, 231~263쪽.
- 박태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된 김주열의 시신』, 『역사비평』 통권 18호, 1992 봄호, 역사비평사, 189~192쪽.
-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통권 46호, 1999 봄호, 역사비평사, 174~187쪽.
- 이효재, 『여성과 4·19』, 『실천문학』 통권 7호, 1985년 여름호, 실천문학사, 305~308쪽.
- 천정환,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 6, 55~101쪽.
-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역사』 제37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3, 5~44쪽.

Abstract

‘Young Lions’ Revolution and The Lower Classes’ Evaporation  
— Representation of April Revolution and rhetoric of elimination

Kim, Mi-ran

When April Revolution broke out, political elite and intellectuals tried to place the university students on the center of April Revolution history. It means they provided the political character of Revolution and established its limitation. Naturally they wanted to recover the national sovereignty. However they imagined an election was the only measure to recover the national sovereignty. As a matter of fact, to do so is to establish the policy measures of formal equality. And this systematic cooperative approach is not for the real equality.

Needless to say, at the time of April Revolution the people had no political power and they could not lead the popular movement. They were only mobilized spontaneously for the demonstration. Yet They were regarded as uncontrollable dangerous people. Consequently political elite and intellectuals made active use of dichotomy of violence and nonviolence. The violent lower classes or urban poor were considered as rioters and they could achieve magnificent effects to quell popular demands.

**Key words** : April Revolution, university students, recovery of national sovereignty, dichotomy of violence and nonviolence, the lower classes, urban poor, rioters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